

# 1961년 중조·소조 우호 조약 체결의 재고찰: 양면 동맹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량미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냉전 시기 북한과 중국 및 소련 간의 불안정한 동맹 관계는 1961년 7월에 체결된 중조 및 소조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기반으로 했다. 이 연구는 동맹 체계에 있어 약소국의 전략적 목표와 강대국의 영향력 공존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틀을 활용하여 이 시기 중조·소조 동맹 조약이 제도화되는 동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중조·소조 동맹 체결은 서로를 위협으로 인식하여 형성된 동맹이라기보다 중국과 소련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공존의 상황으로 인해 가능했다. 또한 약소국인 북한은 핵보유국인 소련으로부터 안보 지원을 받고, 중국과 공유하는 대미 위협 인식이라는 두 가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면 동맹 관계를 모색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조·소조 동맹 체결은 중소 갈등 상황과 북한의 전략적 목표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양면 동맹, 영향력 공존, 중소 갈등, 북한

## I. 서론

### 1. 문제제기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체결과 제네바 회담의 결렬로 동북아 지역은 남북 삼각관계와 북방 삼각관계의 대립으로 구조화되었다. 한·미·일 관계는 한일 간의 명시적인 동맹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했다. 반면, 중·북·소 삼국 관계는 동맹 조약을 체결했지만, 불안정성을 내포한 협력 관계를 이어 갔다.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체가 주권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했습니다. 또한 본 논문의 초고는 2023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논문의 발전을 위해 토론을 맡아 주신 정한범 교수님, 최재덕 교수님, 박종철 교수님과 유익한 논쟁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 간의 협력에 기반한 것과는 달리, 중·북·소 삼국은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 1940년대 중국의 국공내전, 1950년대 한국전쟁을 통해 성립된 ‘국제주의적’ 관계를 기반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1930년대 항일전쟁을 거치며 형성된 삼국 간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반한 관계 규범, 국공내전을 통해 구축된 중북 ‘혈맹’ 관계, 그리고 한국전쟁 동안 나타난 국가 안보와 ‘국제주의’ 이념 사이의 결합 및 충돌을 통해 변화했다.

중·북·소 삼국 관계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동맹국 간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수반하는 다자 간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중·북·소 삼각안보체제는 1961년 7월, 선후로 소련과 중국이 북한과 체결된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동맹 관계의 제도화는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 이후부터 조약 체결까지, 북한의 대소 동맹 체결 요구, 소련의 대북 동맹 조약 체결 연기, 중국의 대북 동맹 체결 시도 등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구조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미·일 삼각관계와 달리, 중·북·소 동맹 관계는 북한이 중국 및 소련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공식적인 동맹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북한이 중국 및 소련과 양면 동맹을 제도화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즉 본 연구는 북한이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서로 갈등하는 두 강대국과 거의 동시에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북한과 중소 동맹 체결 과정을 연구하려는 중요한 이유는 이론적 차원에서 ‘양면 동맹’ 개념을 통해 중조, 소조 동맹 체결 과정을 재검토하기 위함이다. 또한 현재 북한은 냉전기의 북방 삼각관계 경험을 이용해 한미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중러 사이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현재 행위(behavior)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 2. 기존 연구의 한계

중조, 소조 동맹 형성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주로 중조 동맹 체결 원인을 설명하거나 중소 분쟁과의 연관성을 논의했다. 우선, 중조 동맹 체결과 관련한 연

구로 대표적인 최명해(2008)의 연구는 동맹 형성 맥락(context)과 동인을 통해 양국 동맹의 형성 과정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중조 동맹 형성의 세 가지 상황적 맥락, 즉 대내적 차원에서는 북한 내부 정치적 역학 구도의 변화, 체계적 차원에서는 중소 분쟁, 개인적 차원에서는 김일성의 외교적 능력 등 요인을 지적했고 조약 체결 동인을 중북 간의 대미 균형(Anti-American Balancing)과 상호결박(Mutual tether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최명해, 2008: 315).<sup>1</sup>

반면, 유현주(2022)는 중국이 북한을 위협의 대상으로 견제하지 않았기에 중북 간의 상호 결박이 동맹 체결의 동인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중소 경쟁 하에서 양국이 견인의 목적을 갖고 대북 구속(Binding) 정책을 취했기에 북한이 두 국가와 공식 동맹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서술했다(유현주, 2022: 234).<sup>2</sup> 이러한 연구들은 소조 동맹보다는 중조 동맹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에 북한이 중국, 소련과 동맹을 체결할 수 있었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역사적 시각에서 중조, 소조 동맹 체결을 연구한 학자들은 중소 분쟁하의 대북 견인력 경쟁을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했다(沈志華, 2017; 박종철, 2011). 기존 연구들이 중소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면, 김보미(2013)의 연구는 중소 분쟁의 상황에서 북한이 동맹 체결 논의를 할 수 있었던 대내외적 배경을 추적함으로써 북한의 대응 과정을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중소 분쟁을 1961년 동맹 체결의 중요한 체계적 요인으로 간주했지만, 왜 북한이 중소 분쟁이 군사 영역에서 격화되었던 1969년 전후가 아닌 중소 전략적 협력과 이념적 갈등이 공존했던 1961년에 동맹을 체결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사실상 1961년 중조, 소조 동맹의 체결은 한국전쟁 이후 8년이나 지연된 동맹이라기보다 예외적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sup>1</sup> 유사한 연구로는 김용호 외(2014); 나영주(2013)의 연구가 있다. 이외, 중소 분쟁하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연구로는 박민형(2016) 등이 있다.

<sup>2</sup> 이 외에도 박창희(2007)는 중북 양국이 동맹을 체결할 수 있었던 요인을 지정학적 이익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했다.

<sup>3</sup> 중조, 소조 동맹 체결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냉전기 북한의 피벗(pivot) 외교의 대내외적 기반 형성을 비대칭적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 최보선(2019)의 연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기존 연구는 삼국 간의 동맹 관계 문제보다 중조 동맹을 단독 주제로 연구했다. 또한 중조, 소조 동맹 체결 과정에서 중국과 소련의 견인력 경쟁을 강조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과 소련과의 동맹을 체결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나아가 기존 연구는 삼국 동맹 메커니즘에서 ‘이중 동맹’의 효과가 북한에 작용했다고 간략히 언급했을 뿐 강대국의 갈등 관계와 북한 간의 역학 관계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글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분석틀을 간략히 소개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1958년 이후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중소 관계의 교착 상태를 고찰하고 양면 동맹 형성의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북한과 중국 및 소련 간의 양면 동맹의 제도화 과정 및 동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양면 동맹 이론의 유용성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 II. 분석틀

스나이더(Snyder)는 동맹(alliance)을 “둘 또는 그 이상의 주권 국가들 사이의 상호 군사 지원에 대한 약속”으로 정의한다(Snyder, 1991: 121). 동맹 참여국들은 안보 이슈에 관한 협력 행위를 통해 외부 위협에 대항하거나 내부 위협을 관리한다. 동맹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권력 분포의 차이에 따라 동맹은 대칭동맹(symmetric alliance)과 비대칭동맹(asymmetric alliance)으로 나눌 수 있다. 비대칭 동맹 관계의 역동성을 설명한 모로우(J. Morrow)는 동맹을 양측 모두 동맹으로부터 안보를 확보하는 대칭동맹과 동맹을 통해 한 국가는 안보 이익을 제공받는 데 반해, 다른 한 국가는 자율성 이익을 확보하는 비대칭동맹으로 나눈다(Morrow, 1991: 904).<sup>4</sup> 모로우는 비대칭 동맹에서 흔히 ‘안보-자율성 교환

<sup>4</sup> 이 외에도 위협 대상국에 대한 공격 여부에 따라 공격적 vs 방어적 동맹, 상대 동맹국 영토 주둔 여부에 따라 정치형 vs 주둔형 동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전재성(2004), 이수형(2012) 참조.

(Autonomy Security Trade-off)'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즉 강대국은 약소국에 안보를 제공해 약소국의 자율성을 획득하고,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안보를 증진할 수 있지만 정치적 자율성을 양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소국은 강대국에 군사 기지를 제공하거나 강대국의 외교 및 안보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게 된다.

따라서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비대칭 관계에서 국가 안보를 보장받고 동시에 내부적 및 외부적 차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이중 목표를 추구한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강대국과의 동맹을 신중히 고려한다(Steven, 1991: 235). 약소국은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정권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 및 군사 자립 추진, 내부 역량 증진, 다각화 전략 및 지역 협력 촉진 등 다양한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전략 외에도, 강대국 간의 경쟁 상황에서 양면 동맹을 형성하는 것은 약소국에 정책적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약소국의 안보-자율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약소국이 경쟁하는 두 강대국과 동맹 관계를 맺는 현상을 '양면 동맹(Two-sided Alliance)'이라고 한다. 중국 학자 차오웨이(曹玮)와 양위안(杨原)은 고려와 북송-요나라, 조선과 명나라-후금 등 역사 사례를 고찰하여 양면 동맹의 유형 및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했다(曹玮 외, 2015: 63-65).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양면 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조건은 두 강대국이 교착 상태(stalemate)에 있으며, 어떤 강대국도 전쟁을 포함한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동맹 형성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소국은 두 강대국 사이의 전쟁에 연루되지 않고 행동 범위를 확보하고, 동시에 경쟁하는 두 강대국과 동맹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약소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수요가 있으며, 두 강대국은 이 중 일부만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한 강대국이 약소국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약소국은 두 강대국과 동시에 동맹을 맺을 의지(willingness)를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약소국이 정권의 합법성 확보, 국가 안보, 경제 원조와 같은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을 때, 강대국이 자국의 국가 전략이나 대내외 환경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수요

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사회의 기능적 분화(functional differentiation)와 연관되는데, 이는 강대국이 약소국에 제공하는 기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sup>5</sup>

이러한 양면 동맹 관계는 “한 국가(약소국)가 서로 적대하는 두 국가와 각각 동맹을 맺는 것이 갈등 관계에 있는 강대국을 겨냥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曹瑋 外, 2018: 86-88). 첫 번째 유형은 ‘내부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양면 동맹(internally compatible two-sided alliance)’이다. 이 유형은 약소국인 C와 강대국 A와의 동맹이 강대국 B를 겨냥하지 않으며, C와 B의 동맹 또한 A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1945년에서 1949년 사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미국, 소련과 각각 우호 조약을 체결한 것은 미국 또는 소련과 연합하여 상대방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지배권 경쟁에서 중국 공산당보다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유형은 ‘내부적으로 반 양립할 수 있는 양면 동맹(internally semi-compatible two-sided alliance)’이다. 이 경우, A와 C의 동맹은 B를 겨냥한 것이지만, B와 C의 동맹은 A를 겨냥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세 번째 유형은 ‘내부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양면 동맹(internally incompatible two-sided alliance)’으로, 이 경우, AC의 동맹은 B를 겨냥하고 BC의 동맹도 A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고려와 북송-요나라, 조선과 명나라-후금 등 삼국 간의 동맹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논의는 사회학자 캐플로우(Caplow, 1956)가 제기한 삼각관계 연합 이론(Theory of Coalitions in the Triad) 및 디트머(Dittmer, 1981)가 제기한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 개념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삼각관계는 ‘한 국가의 행위가 다른 두 국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삼각관계 중 양국 관계가 다른 두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략적 삼각관계에 비해, 양면 동맹은 두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상호 작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첫째, 전략적 삼각관계가 제로섬(zero-sum) 게임의 원리에 기반한다면, 양면 동맹은 논제로섬(non zero-sum) 규칙에 기반을 두어 두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 공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상태 즉 공동 지배(co-ruling)를 의미한

<sup>5</sup> 관련 연구로는 Buzan · Mathias(2010); Buzan · Zhang(2012) 참조.

다(曹玮 外, 2018: 91). 이는 미소 양극 체제하에서의 분할 지배(divide ruling)가 아니라, 두 강대국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전제된 영향력 공존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경쟁국의 견인 노력을 상쇄시키기 위한 구속(Binding) 동맹이나 위협 대상을 동맹으로 견인하는 결박(tethering) 동맹과는 다른 형태를 의미한다.

둘째, 약소국은 동맹 체결을 통해 자국의 정권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 로맨틱 삼각관계에서 서로 적대적인 두 윙(wing) 국가의 경쟁으로 인해 파생된 피봇(pivot) 국가의 지위는 약소국에 상대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지위는 변동성이 크고 유지를 위해 높은 민감성과 기교가 요구되며 양 윙 국가로부터 오는 위협이 수반된다. 또한 약소국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려 할 때, 약소국의 행동에 불만을 품은 강대국이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유현주, 2022: 219). 그러나 양면 동맹의 제도화 과정에서 약소국은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적어도 강대국 간의 전쟁에 연루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틀을 통해 북한이 중국 및 소련과의 양면 동맹을 형성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북한, 중국, 소련 간의 역학적 관계와 북한이 중소 분쟁에 대응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중·북·소 삼각 관계가 어떤 유형의 양면 동맹에 해당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양면 동맹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I.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중소 관계의 교착

#### 1. 북한의 강대국 내정 개입 배제와 안보 강화 수요

북한·중국·소련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관계 규범을 기반으로 삼국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며, 경제 및 군사 원조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협력을 전개했다. 특히 1954년부터 1956년 사이, 전후 복구 및 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조선로동당 당원들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교육을 강조하며 사

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를 북한 혁명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53: 5-9). 나아가 소련은 ‘국제적 연대성’의 원칙을 견지하기에 각국의 공산당과 로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국제주의적 연대에서 그 위력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론 내부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과 김일성 주도의 혁명 경험을 보급하는 작업에 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창조적 적용의 범위’는 당내 사상 사업과 반대파 숙청에 제한되었으며, 북한과 중소 관계에 적용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1956년에 발생한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은 김일성이 북한과 대 중소 관계를 ‘형제당’ 간의 관계가 아니라 중국과 소련의 ‘대국주의적’ 행태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이 되었다.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당 대회 이후, 반김일성 세력은 외부의 지원을 받아 김일성의 개인 숭배 및 당내 민주주의 결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단일지도체제 확립을 추구한 김일성은 외부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중소 개입을 배제하려 했다. 반김일성 세력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북한 내부에서 ‘사상에서의 주체’에 대한 정당성이 강화되었고, 김일성의 일인 지배 체제 확립이 가속화되었다.<sup>6</sup>

결과적으로 북한은 정치 종교적으로 봉헌된 북한식 독재자중심-개인독재(Personalist-Dictatorship)와 소련의 전체주의 국가 체제가 결합하여 이익이 주권자로서 수령의 이익으로 환치되는 단일성을 갖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김진하 외, 2019: 24-25). 1957년 11월 모스크바 회의에서 지원군 철수가 결정된 이후, 김일성은 ‘정치에서의 자주’를 제기하고 반대파 숙청을 통해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이후 김일성의 일인 지배 체제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독립성과도 연계되었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적 성과를 김일성의 리더십과 결부시키는 관행은 소련이나 중국에 대한 의존을 배제하려는 북한의 목표에도 부합되었던 것이다(Haggard, 1965: 380).

양면 동맹 이론에 따르면, 약소국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이상의 수요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권 합법성의 확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강대국

<sup>6</sup> 일부 연구는 중소 분쟁이 아니라 1954년부터 북한이 ‘자주’라는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금휘, 2018: 307).



의 내정 불개입을 요구했고, 8월 ‘중파 사건’을 계기로 소련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약화시켜 자율적인 행동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따라서 북한이 강대국으로부터 추구하는 수요는 정권 합법성 인정이 아닌 강대국들로부터 안보 지원을 받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 및 경제 발전 모델을 공유할 수 있는 수요로 전환했다.

우선, 중국인민지원군 철군 이후, 북한은 내적 및 외적 균형을 통해 한미 안보 협력에 대응하고자 했다. 1958년 10월 지원군 철수 이후, 북한은 자체적으로 군사 건설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민자위대와 조국보위후원회를 확대 개편한 조직인 로농적위대를 창설했다(김용현, 2006: 157-158). 그러나 자체적으로 안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부차적인 정책적 목표였고 소련과의 동맹 체결이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었다. 사실상 북한은 1956년 제3차 당 대회에서 분단 상태에 있는 남북한은 동맹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국과의 동맹은 남북한의 자주적 평화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전략적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리 조국의 어느 한 부분도 외국과의 군사 동맹에 인입되지 말아야 하며 외국 세력에 의한 예속 상태에 빠져들어 가지 말아야 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길을 막으며 전쟁과 민족적 예속의 길을 열어 놓은 남조선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한미 호상 방위 조약’ 및 기타 예속적 불평등 조약들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조선중앙통신사, 1957: 16).

그러나 1960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외교 정책의 목표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유리한 외부적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사, 1960: 171). 북한은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형제’ 국가인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 강화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보다 소련과의 동맹 체결을 정책적 우선 순위로 했고 이를 위해 친소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련의 안보 지원을 확보하고자 했다.

하지만 북한이 시도한 대소 동맹 체결은 중국과 소련 사이의 협력 관계 및 소련의 안보 전략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상황으로 인해 체결되지 못했다. 이는 북한의 대소 동맹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소련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요한 원인이었다. 또한 북한이 소련 모델보다 중국식 경제 발전 모델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한 것은 소조 동맹이 체결되지 못한 또 다른 요인이었다. 1959년 1월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제21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흐루쇼프(N. Khrushchev)와 한국의 군사적 도발과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북한의 방위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다(시모토마이, 2012: 267-268). 그러나 흐루쇼프는 동맹 조약 체결이 아닌, 북한이 경제 기반이 부족함에도 현실성 없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진영 국가들과 협력하지 않고 자체 생산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을 비난했다.<sup>7</sup>

사실상 소련이 비판하고 싶었던 것은 지방 산업 구조 전환 문제에서 중국식 모델을 따른 북한의 행위였다. 소련은 북한이 중국과 북베트남을 방문한 이후 사회주의 건설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959년 1월 5일에 열린 농업협동조합원대회에서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혁명과 농산물 생산의 급성장 과업을 제기한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국사편찬위원회, 2014a: 335-336). 이는 냉전기 소련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서 진영 내부 국가들이 소련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고 소련식 사회주의 건설 모델을 진영 국가들에 이식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周方银, 2023: 15-16).

김일성은 소련의 비판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를 취했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의 안정을 추구하며 소련과의 동맹 체결을 추진하고자 했다. 모스크바 방문 후 김일성은 1959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화국의 북부에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남한의 애국적 세력과의 통일 전선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극동 및 태평양 지역에서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 지대를 창설하는 문제에 대해 소련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로동신문 1959/02/24). 북한의 ‘반성적’인 태도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상황을 보

<sup>7</sup>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December 16, 1959,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MOL, XIX-J-1-j Korea, 11. doboz, 24/b, 001660/1960; 김보미(2019: 249-250). 김일성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은 1월 22일에 출발하여 2월 8일에 모스크바에서 귀국하였다. 김일성과 흐루쇼프가 만난 시점이 2월 6일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김일성과 흐루쇼프의 회담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로동신문 1959/02/07).

도하는 기사 성향에서도 드러났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서’라는 보도에서 소련을 언급하면서 ‘세계 최대’, ‘세계에서 제일’,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중국 관련 보도는 소련, 북베트남, 몽골 이후 순서에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민공산화 운동 관련 내용만 간략히 언급했다(조선중앙통신 1959/03/15).

그러나 동시에 북한은 대미 위협 인식과 급진적인 경제 발전 모델을 공유할 수 있는 중국의 대북 지지가 필요했다. 중국인민지원군 철수 이후, 중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양국은 오히려 당제 관계를 더욱 강조했다. 1958년 11월 25일, 마오쩌둥(毛澤東)과 김일성의 회담에서 마오쩌둥은 양 당 및 민족은 상호 이해하는 과정이고 조선로동당의 노선이 정확하다고 확신하므로 북한 민족, 로동당, 지도자를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sup>8</sup> 북한은 중소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중요한 논점이었던 전쟁 불가피론과 ‘제국주의’에 관한 논의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예를 들어, 조선인민군 창건 11주년에 서철 중장이 한 보고에서는 소련이 제기한 평화공존이나 전쟁가피론(戰爭可避論)이 아닌 전쟁불가피론을 주장했다(로동신문 1959/02/08).

이 시기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강대국 내정 개입을 배제하고 안보 지원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은 소련과의 동맹을 우선시했지만, 소련의 평화공존 정책 추진으로 인해 중국과의 대미 위협 인식 및 급진적인 경제 발전 모델을 공유해야 하는 수요가 함께 있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정진위, 1985: 34; 김보미, 2019: 265).

## 2. 협력과 갈등의 중소 관계

1950년대 후반, 중·북·소 삼국 관계는 중국과 소련의 관계 변화로 인해 불안

<sup>8</sup> “Conversation from [Mao Zedong’s] First Audience with a [North] Korean Delegation,” November 25, 1958,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Gang er si Wuhan daxue zongbu et al, eds., *Mao Zedong sixiang wansui (Long Live Mao Zedong Thought)*, Vol. 4 (1958-1960) (Wuhan, internal circulation, May 1968): 171.

정한 측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57년 11월 모스크바 회의 이후, 양국의 협력적인 관계는 군사 문제 및 대만 해협 위기로 인해 도전받게 되었다. 장파무선국 건설 비용 문제와 핵잠수함 공동 건설, 1958년 대만 해협 위기 등 일련의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양국 간의 협상 메커니즘의 한계가 드러났던 것이다. 중국은 해군 및 해안 방어 문제를 강화하기 위한 원조를 소련에 요청했지만, 소련은 오히려 중소 합동 핵잠수함 함대 건설을 제안했다. 이에 마오쩌둥은 양국의 핵잠수함 함대 건설을 ‘합작사’에 비유하면서, 소련이 원자력을 개발하여 중국을 통제하고 중국에 조차권을 요구한다고 비난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13a: 390-393). 핵 개발 원조 영역에서도 양국의 잠재적인 갈등이 존재했고 소련은 군축 정책과 핵실험 금지 사이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沈志華, 2011: 242). 소련은 중국이 핵 개발이 아닌 바르샤바 조약 기구(Warsaw Pact, WP) 회원국처럼 소련의 핵우산에 편입되기를 의도했던 것이다(李捷, 1998: 86).

중소 간 대외 전략의 충돌은 인도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1959년 8월, 중국과 인도 국경 지역에서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소련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중국과 인도가 서로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오해를 해소하기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의 태도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중국은 소련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동맹국의 이익을 희생한다고 해석했다(沈志華, 2009: 16). 특히 소련이 1959년 6월 핵 확산 금지 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체결을 앞두고 더 이상 핵무기의 샘플 및 설계 기술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이 더 커졌다. 중국은 유사시 소련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을 방어하려는 결심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내 정치 요인도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59년 7월에 열린 ‘루산 회의(廬山會議)’<sup>9</sup> 이후, 사회주의 근대화 건설 및 대외 정책 영역에서 급진적인 변혁이 ‘정확한’ 정책으로 판단되었고 이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국면을 형성했다(陳兼, 2006: 120).

<sup>9</sup> ‘루산 회의’는 1959년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열린 중앙정치국 확대 회의 및 8월 2일부터 16일까지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를 가리킨다. ‘루산 회의’에서 국방부장 펑더화이(彭德懷)와 외교부 부부장 장웨نتيان(張聞天)이 중국의 경제 발전 총노선에 반대하는 ‘반당 집단’을 형성했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소련이 추진하려는 평화공존 정책의 전략적 의도와 배치(背馳)되었다. 1957년 6월 소련의 ‘반당 종파 사건’에서 흐루쇼프의 평화공존 정책의 정당성 문제가 논의되었고 이는 흐루쇼프 정권의 안정성 문제로 전락했다. 이 시기 소련의 미소 평화공존 정책은 독일 문제와 연계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흐루쇼프는 서독을 중립화하고 서독이 나토의 지전략적(geostrategic) 아킬레스건이 되어주거나 동독과의 무역을 통한 연결고리가 되어 주기를 기대했다(Zubok, 1993: 16). 또한 소련은 평화공존 정책을 통해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를 포함한 중립국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대미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sup>10</sup>

양국 간의 갈등은 이데올로기 논쟁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면서 결국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1960년 6월 말 부카레스트(Bucharest)에서 열린 루마니아 제3차 로동당 회의에서의 양당 간 논쟁과 1960년 7월 16일, 소련이 중국에 파견한 자국 전문가들을 전면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사건은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이다. 양국 이데올로기 논쟁 이후, 마오쩌둥은 중국과 소련 사이의 분쟁이 소련의 평화공존 정책과 중국의 혁명적 접근 사이의 견해차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중소 분쟁을 이념적 영역으로 제한하며 소련공산당에 대한 간접적 비판을 시도했으나, 양국 관계의 악화를 피하려 했다.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대소 유화 정책(appeasement policy)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흐루쇼프와 아이젠하워에게 동시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을 지적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13b: 231-239). 마오쩌둥은 흐루쇼프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용주의자라고 비판했지만, 중국과 소련의 근본 이익은 양국이 협력할 것을 요구하며, 일부 영역에서의 충돌은 일시적이라고 지적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11: 599-602).

그러므로 1960년에서 1961년 사이는 중소 분쟁에 있어서 특수한 시기로 평가된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해 악화한 중국 국내 경제 상황은 마오쩌둥이 소련과 타협을 모색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중소 양당의 대외 정책

10 “科茲洛夫提交的報告草稿：布加勒斯特會議總結(1960年 7월 13일),” 沈志華 編, 『俄羅斯解密檔案選編：中蘇關係』9: 138-139.

은 표면상 점차 일치되는 현상이 일어났다(李丹慧, 2006: 132). 마오쩌둥은 1961년을 중소 관계를 위한 ‘완충’ 단계로 인식하고 1961년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대소 정책을 결정하려고 했다. 중국은 소련의 대중국 강경 정책에 대응하여 ‘원칙을 견지하고 후발제인(後發制人) 하며; 투쟁을 견지하고 (토론의) 여지를 남기며; 단결을 강조하고 분열을 반대한다’라는 대소 방침을 제기하여 소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王泰平, 1998: 237). 중국 내에는 ‘수정주의자 소련’에 대한 공통한 인식이 있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중국이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 소련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면, 소련은 외교 및 안보 요인으로 인해 중국과 타협했다. 소련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핵무기가 없는 지대를 건설하려는 소련의 정책을 지지한 점에 만족했다(李丹慧, 2006: 156). 당제 차원 및 외교 영역에서의 중소 협력은 중국의 대소련 정책에 대한 지지와 소련의 중국에 대한 군사 및 기술 원조 제공으로 이어졌다. 흐루쇼프는 중국에 MiG-21 전투기 생산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안했고, 중국은 소련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약속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07: 389-390). 1961년 7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었던 천이(陳毅)는 소련을 방문하여 라오스 문제, 동독 문제, 군축 및 핵실험 재개에 관한 소련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sup>11</sup>

이 시기 중소 관계는 완전한 분열이 아닌 교착 상태에 있었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 그리고 흐루쇼프의 경제 보복 조치는 중국 지도부의 대소련 정책의 변화를 촉진했다. 마오쩌둥은 수정주의와의 이념 경쟁을 지속하고자 했으나, 현실적인 정책적 이유로 인해 소련과 일시적인 타협을 추구했다. 중국과 소련의 교착 관계는 양면 동맹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었고 북한에게 구조적인 제약보다 기회의 요인으로 작동했다.

11 “Record of a Conversation between N. S. Khrushchev and Chen Yi, Deputy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uly 5, 1961,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RGANI, f. 52, op. 1, d. 571, ll. 148-165.

## IV. 양면 동맹의 제도화 과정 및 요인

### 1. 중조·소조 동맹 체결 과정

1960년 초, 중국과 소련의 일시적인 타협 정책이 추진되기 이전 중국은 안보 전략의 전환을 시도했다. 중국은 북한과 북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최명해, 2009: 131-133). 이에 따라 마오쩌둥은 북한과 북베트남이 동의할 경우, 양국과도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毛澤東, 2013b: 350-351). 이후 북한과의 동맹 체결을 논의하기 위해 김일성을 중국으로 초대했고 북한을 중국 측으로 유인하려고 했다(국사편찬위원회, 2014b: 240). 이번 회담에서 김일성과 마오쩌둥, 저우언라이(周恩來), 덩샤오핑(鄧小平)은 소련공산당 제20차 당 대회 이후 처음으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논의하였다(吳淪西, 1999: 269-270).

그러나 중조 동맹 체결 논의는 중국의 대내외 상황 및 소련의 개입으로 인해 유예된 것으로 보인다. 대약진 운동의 전개 상황, 소련 전문가 철수 등의 사건으로 인해 중국은 외부보다 내부 문제 해결이 우선시되었다. 또한 1960년에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취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구상도 있었다(牛軍, 2006: 126). 중국이 미국의 베트남 문제 개입을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강조하여 북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한 시기는 1962년 이후였다.

중조 동맹 체결이 유예된 또 다른 요인은 소련의 개입이었다. 소련은 중북 양국 사이의 빈번한 상호 방문과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무상 원조를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인식했다.<sup>12</sup> 따라서 흐루쇼프는 중북 갈등을 유발하려는 전술을 펼쳤고 이는 일정 기간 효력을 보았다. 1960년 6월,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했을 때, 소련은 1956년 11월 30일에 중국 주재 소련 대사 유딘(Yudin)

<sup>12</sup>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of the DPRK,” June 12, 1960,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AVPRF fond 0102, opis 16, papka 87, delo 27.

과 마오쩌둥 사이에 이루어진 회담 내용을 그에게 전달했다. 회담 내용은 마오쩌둥이 “너지 임레(Nagy Imre)가 사회주의 진영에서 탈퇴하려 시도한 것과 유사하게, 김일성 역시 사회주의 진영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한상준, 2018: 303).

이 회담 내용을 접한 김일성은 마오쩌둥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으며, 중국공산당과 달리 소련공산당과 소련의 지도자들이 조선로동당과 북한 정부의 정책을 결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중소 분쟁에 대해서도 김일성은 일관적으로 소련 측에 편승할 것을 약속했다(국사편찬위원회, 2014b: 232-235). 김일성의 친소적인 태도를 확인한 흐루쇼프는 북한과의 동맹 조약 체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흐루쇼프는 소조 조약은 한국의 ‘군국주의’를 억제하고 남북 양국의 역량 균형(balance the force)을 이루는 데 유익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을 함께 약속했다.<sup>13</sup>

그러나 모스크바 방문 이후, 김일성은 중국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하면서도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일성은 소련 측에 중국이 이데올로기 문제에서 소련 공산당과 경쟁하려 시도한다고 지적하고, 소련이 제시한 평화공존 정책이 레닌주의와 일치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련의 입장을 지지했다(국사편찬위원회, 2014b: 239-241). 그러나 북한은 양 강대국의 경쟁 관계를 완화하려는 정책이나 어느 일방에 완전히 편승하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강대국 경쟁 관계로부터 오는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중국이나 소련에 완전히 편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Koh, 1969: 942). 김일성은 중소 양 강대국의 경쟁에 대한 대응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957년 모스크바 회의에서 나는 중소 분쟁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소 분쟁을 평가하고 고물카(Gomulka)처럼 논의할 줄 알았지만 나는 언

13 “Excerpts from V. P. Tkachenko ‘The Korean Peninsula and Russia’s Interests,’” June 17, 196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V. P. Tkachenko, *Koreiskii Poluostrov i interesi Rossii [The Korean Peninsula and Russia’s Interests]* (Mosow: Vostochnaya Literatura, 2000). 시모토마이 (2012, 278).



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소련은 우리에게 할 말이 없었다 ... 모든 국가는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소련과 교류해야 한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흐루쇼프는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교류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든 우리는 그에게 경의를 표시해야 한다.<sup>14</sup>

그러므로 중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 논쟁이 격화되면서, 북한은 대외적으로 양 강대국의 단결을 호소했다.

현 시기에 있어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그러나 이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위험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는다 ... 문제는 평화를 확고하게 수호하기 위하여 이 모든 역량과 요인들을 단단하며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데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 담보로 된다. 바로 그래서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상적 머슴꾼들인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파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 하고 있다(로동신문 1960/07/01).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안보 지원을 받고 중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을 공유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흐루쇼프의 방북이 예정됨에 따라, 중국과의 동맹 체결은 차선책으로 전환되었다. 소련이 중국에서의 전문가를 전부 철수시키는 계획에 대해 김일성은 친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소조 관계가 중조 관계보다 우위임을 강조했다(국사편찬위원회, 2014b: 246-251). 하지만 소조 조약은 소련의 대미 정책으로 인해 체결되지 못했고 북한도 중소 분쟁에 관한 보고나 토론 내용을 도당위원회들에 알리지 않는 신중함을 보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14b: 295-296, 392). 흐루쇼프의 북한 방문이 취소되면서 소련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보상해 주었다. 1960년 11월, 북한과 소련 간의 경제적 협조에 관

14 “Account on the Reception of the Delegation of Our Party by Comrade Kim Il Sung and the Talks that Took Place in this Meeting between Him and Comrade Manush,” October 4, 1961,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AQPPSH, MPP Korese, V. 1961, D4.

한 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의정서에 따르면, 소련은 북한에 제공한 7억 6천 루블에 대한 상환을 면제할 것을 협의하였고 총 1억 4천만 루블의 차관에 대한 상환 기간을 연기할 것을 결정하였다(로동신문 1960/11/02). 또한 소련은 유엔 제15차 총회에서 주한미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를 주장하고 북한이 제안한 남북한의 연방제 방안을 지지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소련 정부 수반이 유엔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통일의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했다고 평가했다(국사편찬위원회, 2014b: 350).

그러나 소련의 대북 유인 정책은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북한은 중소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중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양국이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60년 8월 북한 무역상 리주연의 중국 방문에서 양국은 과학 기술 협력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의정서를 채택했다(로동신문 1960/10/19). 이후 김일성은 소련 10월 혁명 43주년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국 군사대표단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했다(국사편찬위원회, 2014b: 385-387). 1960년 10월 1일, 중국 건국 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중국 대사관 연회에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전원을 참석시켰다. 연회에서 한 최용건과 차오샤오광(喬曉光)의 연설에서도 양국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 성과를 강조하고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중북 간의 형제적 우의를 강조하였다(로동신문 1960/10/02). 중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은 불가리아를 포함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에 소극적이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14b: 365-366). 또한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막대한 규모의 물질적 및 정신적 원조에 대해서도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다(국사편찬위원회, 2014b: 396).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김일성이 1960년 선후로 중국과 소련을 방문한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함께 반대할 것을 제기했다(로동신문 1960/08/12). 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 논쟁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이는 근원적으로 1956년 8월 ‘중파 사건’ 이후 형성된 김일성의 반대국주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에서 교조주의와 수정주의 모두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

립할 것을 강조하는 북한의 행위는 소련과 동유럽이 최소한 북한이 중국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게 했다. 1961년에 들어, 북한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Anton Puzanov)의 대북 평가도 호의적인 방향으로 전환했고 북한의 대남정책은 소련의 평화공존 정책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sup>15</sup>

이러한 북한의 정책적 의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었다.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석탄과 식량 공급이 늦어졌기에 김일성은 중국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sup>16</sup> 그럼에도 김일성은 중국의 노선과 정책이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외부 위협에 대응하여, 북한은 케네디(J. F. Kennedy) 정권의 출범을 평가하면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한국과 대만에서 미군 철수를 추진함에 있어서 타협이 아닌 ‘투쟁’의 수단을 강조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적 행보를 관찰한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은 북한이 중국과 대미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지지한다고 평가했다.<sup>17</sup> 그러므로 1960년 11월 모스크바 회의 이후, 중국은 북한이 중국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중소 관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경제 수단 대신 동맹의 제도화를 통해 북한을 중국에 편승시켜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조 동맹이 중조 동맹보다 먼저 체결되었다. 중소 분쟁하에서 소련의 대북 정책은 중국보다 대북 영향력 우세를 차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변화했다. 비록 중소 간의 전략적인 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소련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견제했다. 이 과정에서 소련의 대북 동맹 체결이 이루어졌고, 북한은 소련의 군사 원조를 확보하는 동시에 소조, 중조 이중 동맹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1961년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상임 위원회 위원이며 소련 내각 제1 부수상인 코시긴

<sup>15</sup> “Report, Embassy of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in the DPRK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Hungary,” March 16, 1961,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MOL, XIX-J-1-j-Korea-5/ca-003645/1961 5.d.

<sup>16</sup> “Chinese Policy toward the DPRK and Behavior of the Chinese Ambassador in Pyongyang,” March 16, 1961,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MOL, XIX-J-1-j-Korea-5/bc-0030/1961 5.d.

<sup>17</sup> “朝鮮駐華使館代辦馬東山向曾湧泉副外長介紹5月16日南朝鮮軍事政變的情況, 外檔(1961년 5월 30일)” 중국외교부당안, 106-00581-08, pp. 1-7.

(A. Kosygin)이 북한을 방문했다. 코시긴은 군중대회 연설에서 북한의 경제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로동당과 북한 정부의 평화적 통일 방안을 지지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대외적으로 ‘사회주의 승리’의 결과물을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원조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1961년 4월에 있었던 흐루쇼프-케네디 회담 의의를 간단히 언급하면서 평화공존 정책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았다. 북한 부수상 김일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는 미국을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전반적으로 소련의 정책을 지지했다. 코시긴 방북 이후, 1961년 6월 29일, 김일성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소련을 방문했다. 6월 30일 북소 양국은 회담을 진행했고 7월 6일에는 「소조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중조 동맹을 체결하기 위한 양국 간의 교섭 과정을 놓고 볼 때, 김일성은 소조 동맹을 이용하여 중조 동맹을 체결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중국은 소조 동맹 조약 체결 이전부터 코시긴의 방문이 조약 체결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북한 주재 중국 대사 차오샤오광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탐색했다. 김일성은 중조 동맹 체결을 수용하고 6월 29일에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 소조 동맹 조약 초안 전문을 보냈다. 소조 동맹 초안에 따라 중국은 동맹 조약 체결 준비를 진행했고 6월 30일, 저우언라이는 조약 체결을 위해 김일성에게 중국 방문 요청 서한을 보냈다.<sup>18</sup> 방문 일정이 6월 30일에 정해졌음에도 북한은 7월 8일에 가서야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인해 7월 중순에 중국을 방문할 것을 대외에 공개했다(로동신문 1961/07/08).

7월 10일, 소조 공동 성명 발표 당일, 김일성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당정대표단은 중국을 방문해 중조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이번 방문이 두 나라 당, 정부, 인민들 간 불멸의 우의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저우언라이도 ‘각 방면에 걸친 호상 원조 및 협조 관계의 가일층의 강화는 북한과 중국의 공동의 위업과 과업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양국 동맹 체결을 암시했다(로동신문 1961/07/11). 7월 10일 북한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설에서 류사오치(劉少

<sup>18</sup> 이상의 체결 과정은 선즈화(2017: 639-641) 참조.

축)는 국제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방지하며, 평화적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과 중국의 노력을 강조했다(로동신문 1961/07/11). 이는 기존에 중국이 반대했던 전쟁불가피론과 평화공존 정책과 어긋난 발언이었지만, 중국과 소련 관계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가능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중조 동맹 체결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7월 11일에 「중조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 2. 양면 동맹의 제도화 요인

위에서 검토한 북한의 전략적 목표, 중소 관계의 교착, 양면 동맹의 제도화 과정을 놓고 볼 때, 중국과 소련의 대북 영향력 경쟁은 중소의 제한적인 갈등 및 북한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양립 가능한 양면 동맹’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내부적으로 양립 가능한 양면 동맹’은 서로를 위협으로 겨냥하여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약소국에 대한 영향력 공존의 상황으로 인해 체결된다. 중소, 소조 양면 동맹을 형성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소련의 일시적인 타협으로 인해 완화된 중소 관계는 중조, 소조 양면 동맹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중국과 소련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공존 즉 공동 지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가능했다. 중국과 소련 사이의 전략적 갈등 상황에서 양국 간의 영향력 경쟁은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는 지정학적 세력 구도 속에서 각축하는 강대국의 관점에서 북한이 지닌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고, 강대국들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할 요충지로 선정되어 중추국(pivot state)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신범식, 2020: 39). 그러나 중국과 소련의 대북 정책은 전쟁이나 제재를 통해 완전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유지를 전략적 목표로 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경쟁국인 소련의 동맹 체제에 편승했을 때, 자국의 안보와 아시아 혁명의 주도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음을 인지했다(김보미, 2013: 186). 하지만 소조 동맹이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동맹 체결이 필요했다.

이 시기의 중·북·소 삼각관계는 여전히 미소 냉전 구도 속에서 상호 의존성과 협력이 강조되었다. 이는 「소조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당일, 흐루쇼프가 조약의 방위적 특성을 강조하고 동맹의 유효성을 부각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흐루쇼프는 군중대회에서 소조 동맹 조약이 한·미·일 삼각 동맹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적인 조약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약이 체결된 구체적인 동기는 미일 동맹 강화, 미국의 한국으로의 핵무기 반입, 남한의 군사 정권 등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맹 체결 요인과 별개로, 동맹의 유효성은 한국과 일본이 소련의 동맹국인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강조했다.

방위적인 성격을 띤 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미국, 일본 및 기타 열강 정부들이 극동지역에서의 긴장 상태의 완화와 안전 보장에 관한 우리들의 모든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군사 기지와 침략 블럭들을 철폐하며 침략적인 미일 동맹을 체결하지 말라는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극동과 전체 태평양 지역에 평화 지대, 우선 핵무기 없는 지대를 창설할 데 대한 제안을 무시하였다 ...

서부 열강들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염원에 부합되게 조선의 두 부분이 통일되도록 한 데 대한 사회주의 나라들의 거듭되는 호소도 무시하였다 ... 군사 파쇼 도당으로부터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는데 이 도당의 수중에 미국계 기재로 장비된 60만 군대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우리는 이 조약의 군사적 조항들이 결코 실지로 적용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침략적 모험의 계획들을 계속 꾸미고 있는 극동에 있는 세력들 우선 남조선과 일본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의 동맹자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로동신문 1961/07/07).

둘째, 약소국인 북한은 핵보유국인 소련의 안보 지원과 중국과 공유하는 대미 위협 인식이라는 두 가지 핵심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면 동맹 관계를 모색했다. 물론 북한에게 양 강대국과의 동맹 체결은 전략적 자산인 동시에 딜레마의 위협을 수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중조 및 소조 동맹의 상

호 보완성을 이용해 전략적 목표를 실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대내 정치 요인 및 소련의 핵 억지력을 제공받고자 소조 동맹을 우선시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소조 관계가 중조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중국의 동맹 체결 제안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소련의 개입으로 중국과의 동맹 체결 과정에서 난항을 겪자 다시 소련과 동맹을 체결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했다. 이후, 김일성은 소련 방문 이전, 소조 동맹 체결 계획을 중국에 전달했으며, 이를 활용하여 중조 동맹을 체결하는 행보를 보였다.

소조 동맹 체결을 우선시했음에도 강대국의 이데올로기 분쟁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북한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에 반대하면서 ‘주체’ 원칙을 강조했다. 북한이 ‘주체’의 원칙, 규범을 강조한 것은 어느 한 편으로의 완전한 경사를 회피하는 논리적 정당화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강대국의 경쟁에 대응하여 약소국이 현실 정치 차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규범 및 정체성 차원에서도 국제 사회의 규범에 대한 호소를 통해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신중호 외, 2020: 489).

다른 한편, 동맹에 대한 의존성 및 안보 공약의 정도를 놓고 볼 때, 북한은 양면 동맹을 통해 ‘안보-자율성 교환’의 속성을 약화할 수 있었다. 이는 한편으로 북한이 강대국과 체결된 양면 동맹을 역이용할 수 있었고, 강대국으로부터의 방기 우려를 상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핵우산을 제공하는 소련의 동맹 공약의 정도가 낮을지라도 중국의 강력한 안보 공약이 보완해 주고 있었기에 ‘안보-자율성 교환’의 속성이 일정 정도 완화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자주적인 외교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셋째,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중조 동맹보다 소조 동맹 체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조 및 소조 동맹의 체결은 1960년 1월의 미일 안보 조약 개정, 케네디 정권의 강력한 반공 정책과 박정희 군사 정권의 등장으로 형성된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에 대응하기 위한 균형 동맹이었다. 특히 이러한 외부적 차원의 요인들은 중조 동맹보다 소조 동맹 체결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소련은 1961년 1월 케네디 정권 출범 시기까지 동독 의장인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의 평화조약 체결 요구를 보류했다. 하지만 1961년 4월 이후, 흐루쇼프

는 동독과 별도의 조약 체결을 제의했다.<sup>19</sup> 6월에 개최된 빈(Vienna) 회담에서도 흐루쇼프는 동독과의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의지를 미국에 내비쳤다(스마ither, 2019: 308). 그러나 1961년 8월, 소련이 동서독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여 동독과 단독 조약을 체결한 후,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었고 미소 양국은 일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타협적인 정책을 추진했다(최재호, 2022: 77).

바로 이 시기 소련이 소조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1961년 3월까지도 흐루쇼프의 북한 방문과 동맹 체결은 여전히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었다.<sup>20</sup> 1961년 4월 전후로 소련이 소조 동맹 조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할 경우, 북한과 동맹 조약 체결을 통해 최소한 한반도 지역에서 군사 균형을 이루려는 소련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소련은 한반도 지역에서 현상 변경보다 현상 유지를 통해 국가 이익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sup>21</sup>

외부적 차원의 요인이 소조 동맹 체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소련이 조약에 부가한 전제 조건에서도 알 수 있다. 1961년 3월 김광협과 흐루쇼프의 회담에서 김광협은 흐루쇼프의 방북이 두 차례나 연기된 상황을 강조했다. 이에 흐루쇼프는 미소 관계가 소조 조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미소 사이의 협약이 체결될 경우, 소조 조약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sup>22</sup> 흐루쇼프는 케네디 정권과 평화공존이 이루어질 경우, 동 조약은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Shimotomai, 2012: 283). 그러므로 북한과 소련과의 동맹 체결은 미소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조약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반면, 북한은 정부

<sup>19</sup> “Letter from Khrushchev to Ulbricht, in Response to Ulbricht’s Previous Letter Regarding a Peace Treaty,” January 30, 1961,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SED Archives, IfGA, ZPA, J IV 2/202/129. *CWIHP Working Paper* No. 5, “Ulbricht and the Concrete ‘Rose’.”

<sup>20</sup> “Report, Embassy of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in the DPRK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Hungary,” March 16, 1961,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MOL, XIX-J-1-j-Korea-5/ca-003645/1961 5.d. Translated by József Litkei.

<sup>21</sup> “북한의 대외정책, 1962-1970,” DA0093743, 9901894-99991231-1962-000001, 한국국가기록원.

<sup>22</sup> “Excerpts from V.P. Tkachenko ‘The Korean Peninsula and Russia’s Interests’”, June 17, 196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V. P. Tkachenko, *Koreiskii Poluostrov i interesi Rossii [The Korean Peninsula and Russia’s Interests]* (Moscow, Vostochnaya Literatura, 2000).



성명을 통해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통일 이전에 남북한이 체결한 일체 군사 정치적 조약과 협정들은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로동신문 1961/07/07). 이는 남북한 통일 이후, 외부 세력의 개입을 배제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반영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양면 동맹’ 형성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중조, 소조 동맹 제도화의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한국전쟁 초기 형성되었던 중·북·소 삼각관계와 비교할 때, 1961년 전후의 삼국 관계는 ‘형제 국가’의 관계보다 외부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 이익 변수로 인해 작동되었다. 이 시기 중국과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에서의 이데올로기 논쟁은 점차 지역적 차원의 중소 갈등 구도로 전환되었지만, 중·북·소 삼각관계는 상호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동맹 관계가 아니라 냉전 구도하에서 상호 의존성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삼각관계였다. 따라서 중조, 소조 동맹 체결은 서로를 위협으로 인식하여 형성된 동맹이라기보다 중국과 소련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공존의 상황으로 인해 가능했다.

북한은 핵보유국 소련으로부터의 안보 지원 및 중국과의 대미 위협 인식 공유라는 두 가지 수요를 모두 충족해야 했기에 양면 동맹 관계를 모색했다. 소련의 평화공존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북한은 소조 동맹만이 아니라 중조 동맹을 통해 소련으로부터의 방기 우려를 상쇄해야 했다. 또한 어느 한 강대국에 편승할 경우, 북한이 추구했던 강대국 내정 개입 배제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할 수 없었기에 북한은 핵 역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 소련과의 동맹을 우선시했지만 동시에 소조 동맹을 이용하여 중조 동맹을 체결하고자 했다.

‘양면 동맹’ 형성의 분석틀은 중조, 소조 동맹 체결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지역적 차원에서 양 강대국의 영향력 경쟁은 분할 지배가 아닌 일시적인 공동 지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약소국은 완전한 중립이나 편승이 아닌 단계별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위를 전개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중소 관계의 복잡성을 활용하여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자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원조를 확보하고자 했다. 따라서 ‘양면 동맹’을 통해 중조, 소조 동맹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강대국의 갈등 관계로 인한 약소국에 대한 영향력 공존 및 약소국의 수요가 양면 동맹 체결의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60년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중조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은 동맹의 사문화 논란 의혹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즉, 북한의 정치 안보적, 경제 사회적 발전에 중조 동맹 조약이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특히, 2019년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전통적인 중조 친선협조관계’를 강조하고 중국도 북한과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의 ‘전통적 우의’를 대외에 과시했다. 한편, 탈냉전 이후 중리 양국은 미국 단극 체제하의 국제 질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군사 교류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중리 관계가 “신시대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부상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공간(room)도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의 행보를 통해 강대국으로부터의 자주와 의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다. 특히, 북한은 대 중리 관계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완화하는 데 러시아가 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했다.

최근 북한은 중·북·러 삼국 간의 연대를 심화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기반으로 중북, 북러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남북, 북미 대화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리 관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북한의 대 중리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냉전기 중·북·소 삼각관계에 대한 연구 또한 현재의 동북아 안보 지역의 미묘한 삼각 균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참고문헌

- 구갑우. 2014.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현대북한연구』 17(1): 197-250.
- 국사편찬위원회. 2014a. 『북한관계사료집』 제75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14b. 『북한관계사료집』 제76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김보미. 2013. “중소분쟁시기 북방삼각관계가 조소, 조중 동맹의 체결에 미친 영향 (1957~1961).” 『북한연구학회보』 17(2): 171-202.
- \_\_\_\_\_. 2019. 『김일성과 중소분쟁: 북한 자주외교의 기원과 형성(1953~1966)』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김용현. 2006. “한국전쟁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0(2): 148-163.
- 김용호·박주진. 2014. “북·중 동맹관계의 재고찰: 제도와 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8(1): 141-162.
- 김진하·박형중·오경섭·한기범. 2019. 『북한 외교정책: 정책 패턴과 북핵 외교 사례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 나영주. 2013. “북핵문제와 북중동맹: 중국의 동맹 유지 전략.” 『통일문제연구』 25(2): 61-93.
- 박민형. 2016. “북중동맹 55년 평가: 한국의 전략적 함의.” 『국방연구』 59(3): 1-24.
- 박종철. 2011. “중소분쟁과 북중관계(1961-64년)에 대한 고찰.” 『한중사회과학연구』 9(2): 45-80.
- 박창희. 2007. “지정학적 이익 변화와 북중동맹관계: 기원, 발전, 그리고 전망.” 『중소연구』 113: 27-55.
- 서동만. 2005.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1945~1961)』. 서울: 선인.
- 션즈화(沈志華) 저. 김동길 역. 2017. 『최후의 천조: 마오쩌둥, 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서울: 선인.
- 시모토마이 노부오(Shimotomai, Nobuo) 저. 이종국 역. 2012. 『모스크바와 김일성: 냉전기의 북한 1945-1961』. 서울: 논형.
- 스마이저, 윌리엄(Smyser, R. William) 저. 김남섭 역. 2019. 『알타에서 베를린까지: 독일은 어떻게 분단되고 통일되었는가』. 경기: 동녘.
- 신범식. 2020. “지정학적 중간국 우크라이나의 대외전략적 딜레마.” 『국제지역연구』 29(1): 37-69.

- 신옥희. 2017.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신종호·김갑식·현승수 등. 2020.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 유현주. 2022. “북중 동맹 체결의 국제정치학적 논의.” 『국제정치논총』 62(4): 203-244.
- 은천기. 1994. 『북한의 대 중소 외교 정책』. 서울: 남지.
- 이금휘. 2018. “중국 학계의 북한 자주외교노선 수립에 대한 인식과 북 중 관계.” 『통일인문학』 76: 287-313.
- 이종석. 2002. 『북한-중국 관계』. 서울: 중심.
- 이수형. 2012. “남북한 한반도 정치와 강대국 동맹정치 간의 연계성 분석.” 『세계정치』 16: 143-169.
- 전재성. 2004.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 정책.” 『국방연구』 47(2): 63-94.
- 정진위. 1985. 『북방삼각관계: 북한의 대 중·소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법문사.
- 주보크, 블라디슬라프(Zubok, Vladislav M.) 저. 김남섭 역. 2016. 『실패한 제국 1: 냉전 시대 소련의 역사』. 파주: 아카넷.
- 최명해. 2008. “북중 동맹 조약 체결에 관한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42(4): 315-338.
- \_\_\_\_\_. 2009. 『중국·북한 동맹관계』. 서울: 도서.
- 최보선. 2019. “북한·중국·소련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북한의 외교: ‘피벗외교’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재호. 2022. “냉전 체제 속의 베를린: ‘자유의 섬’으로서의 공간에 대한 고찰.” 『독일연구』 51: 59-96.
- 한상준. 2018. “중국인민지원군 단독철군 문제 재론.” 『동양사학연구』 142: 284-317.
- 曹玮·杨原. 2015. “盟国的敌人还是盟国?: 古代朝鲜半岛国家‘两面结盟’之谜.” 『当代亚太』 5期: 49-57.
- \_\_\_\_\_. 2018. “‘两面结盟’分类与大国共治逻辑: 兼答周方银、王旭彤对《盟国的敌人还是盟国?》的评论.” 『当代亚太』 1期: 67-98.
- 陳兼. 2006. “革命與危機的年代.” 楊奎松 編, 『冷戰時期的中國對外關係』. 北京: 北京大學.
- 李丹慧. 2006. “最後的努力: 中蘇在1960年代初的鬥爭與調和: 1960年代中蘇關係研究之一.” 『社會科學』, 6期: 132-162.
- 李捷. 1998. “從結盟到破裂: 中蘇論戰的起因.” 『黨的文獻』 2期: 83-92.
- 牛軍. 2006. “中國外交的革命化進程.” 楊奎松 編, 『冷戰時期中國對外關係』. 北京: 北京

大學.

- 沈志華. 2009. “难以弥合的裂痕: 苏联对中印冲突的立场及中苏分歧公开化(1959-1960).” 『清华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4期 6号: 5-27.
- \_\_\_\_\_. 2011. 『中蘇關係史綱: 1917-1991年中蘇關係若幹問題再探討』(上). 北京: 社會科學文獻.
- \_\_\_\_\_. 2015. 『俄羅斯解密檔案選編: 中蘇關係』 第7~9卷. 上海: 東方出版中心.
- 王泰平 編. 1998. 『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1957~1969)』 第二卷. 北京: 世界知識.
- 吳冷西. 1999. 『十年論戰: 中蘇關係回憶錄(1956-1966)』, 北京: 中共中央文獻.
- 周方銀·王旭彤. 2016. “两面结盟现象的再思考—兼评: 盟国的敌人还是盟国? 古代朝鲜半岛国家‘两面结盟’之谜.” 『当代亚太』 4期: 25-43.
- 周方銀. 2023. “大國週邊戰略比較: 蘇聯、美國與中國週邊戰略的比較分析.” 『拉丁美洲研究』 45卷 1期: 2-27.
- Buzan, Barry and Albert Mathias. 2010. “Differentiation: a Sociological Approach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6(3): 315-337.
- Buzan, Barry and Yongjin Zhang, 2012. “The Tributary System as International Society in Theory.”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5(1): 3- 36.
- Caplow, T. 1956. “A Theory of Coalitions in the Tria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4): 489-493.
- Dittmer, L. 1981.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 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33(4): 485-515.
- Haggard, M. T. 1965. “North Korea’s International Position.” *Asian Survey* 5(8): 375-388.
- Joseph M. Ha. 1982. “Soviet Perceptions of North Korea.” *Asian Perspective* 6(2) Fall-Winter, 105-131.
- Kim, Inwook J. Woods. 2022. “Survival Politics: Regime Security and Alliance Design on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Global Security Studies*, 7(2): 1-18.
- Koh, B. C. 1969. “North Korea and the Sino-Soviet Schism.”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22(4): 940-962.
- Morrow, James. 1991.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4): 904-933.

- Snyder, Scott A. 1991. "Alliance, Balance, and Sta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5(1): 121-142.
- Steven, David. 1991. "Explaining Third World Alignment." *World Politics* 43(2): 233-256.
- Zubok M. Vladislav. 1993. "Khrushchev and the Berlin Crisis (1958-1962)."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6: 5-33.

### 〈1차 자료〉

- 조선중앙통신사. 1957, 1960. 『조선중앙년감』.
- 『로동신문』. 1959~1961.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53. 『결정집(1953년 당전원회의, 정치·조직·상무위원회)』.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13a. 『毛澤東年譜(1949~1976)』 第三卷. 北京: 中共中央文獻.
- \_\_\_\_\_. 2013b. 『毛澤東年譜(1949~1976)』 第四卷. 北京: 中共中央文獻.
- \_\_\_\_\_. 2011. 『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八卷. 北京: 中共中央文獻.
- \_\_\_\_\_. 2007. 『周恩來年譜(1949~1976)』 中卷. 北京: 中共中央文獻.
-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Digital Archive.
- China-North Korea Relations. <http://digitalai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15/china-north-korea-relations> (검색일: 2022. 12. 5.).
- Sino-Soviet Relations. <http://digitalai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72/sino-soviet-relations/3> (검색일: 2022. 12. 5.).
- Soviet-North Korea Relations. <http://digitalai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20-soviet-north-korea-relations> (검색일: 2022. 12. 5.).

## Abstract

## Reconsideration of the 1961 PRC-DPRK and USSR-DPRK Friendship Treati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wo-Sided Alliance

Meihua Li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During the Cold War, North Korea's unstable alliance with the Sino-Soviet Union was based on the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signed in July 1961. This study examines the driver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C-DPRK and USSR-DPRK alliance treaties during this period using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considers the strategic goals of weaker states and the coexistence of great power influence in alliance form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the PRC-DPRK and USSR-DPRK alliance treaties were facilitated by a coexistence of influence over North Korea by China and the Soviet Union, rather than being an alliance formed out of mutual threat perceptions. Additionally, North Korea, as a weaker state, sought a two-sided alliance because it needed to fulfill two key security needs: security support from the nuclear-powered Soviet Union and a perceived threat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it shared with China.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PRC-DPRK and USSR-DPRK allianc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interplay between the context of the Sino-Soviet Union conflict and North Korea's strategic goals.

**Keywords** | Two-Sided Alliance, Coexistence of Influence, Sino-Soviet Union Conflict, North Korea

